

#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대통령 개헌안

### 6월 지방선거 적용은 사실상 무리... OECD 34개국 가운데 19세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

청와대가 22일 발표한 3차 대통령 개헌안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실제로 만 18세부터 선거권 부여될지 관심이 쏠린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자의 핵심권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는 나이"라며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헌법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이 그들의 삶과 직결된 교육, 노동 등의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소년단체들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을 요구하며 선거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청소년 단체들은 최근 국가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는 법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지난해 12월 만 19세 이상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일괄법 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05년 선거연령 현재 만 19세 확정 이후 선거연령과 관련된 헌법소원은 6차례 제기됐다. 그러나 현재는 "선거권 연령이 입법자 재량사항이고, 만 19세 이상 국민에게만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과 성숙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교육적 부작용 우려



시축하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와 박형서 감독이 22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축구협회 국가대표 훈련장을 방문해 시축하고 있다.

가 있다"며 현행 선거법을 합헌으로 판단해왔다.

현행 공직선거법(제15조)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투표권이 없다. 교육감 선거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도 이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청소년은 교육감 투표에도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청소년이 정치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교육적 부작용이 크다는 논거는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적으로도 OECD 34개국 가운데 19세

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또 최근 세계적 추세는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31 운동 당시 청소년들이 중심에 있었고 유관순 열사는 만 16세였다. 일제 강점기 5만4000명의 학생이 참여했던 학생독립운동, 이승만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던 1960년 4·19혁명,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지난해 촛불혁명까지 청소년들이 정치개혁 중심에 있었다.

조 수석도 "청소년은 멀리 광주학생운동부터 4·19혁명, 부마항쟁, 그리고 촛불시

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그들의 정치적 역량과 참여의식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는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 절차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만 18세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헌법에 선거연령 18세 하향으로 못 박으면 현행 선거법과 상충(헌법불합치)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선거법을 반드시 개정하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 엄윤상 민주평화당 예비후보, 전주시장 출마 선언

민주평화당 소속 엄윤상 예비후보가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엄 예비후보는 22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강한 도시, 사람이 모이고 돈이 움직이는 전주'를 내세우며 전주시장 후보로 출마한다면서 공약 정책을 약속했다.



공약은 전주·완주 상생통합 광역도시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컬러시티 조성, 천년 문화도시 만들기 등의 정책이다.

엄 예비후보는 "현 시장을 포함 지난 20년간 행정관료 출신만이 시장을 이끌어 왔다. 관료출신 시장으로 인해 제자리 걸음만 거듭했다"며 "역동적인 도시, 역동적인 시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채규남 기자

## 김춘진 지사 예비후보, 농생명 혁신 시스템 만들터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위기의 전북 농업을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으로 탈바꿈시켜, 농촌어촌이 편하게 농사를 짓고 도내 청년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는 '농생명 혁신 시스템'을 갖춰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유경제 복합형 뉴스마트팜"을 시범 운영하고, 기존 유통시설을 네트워크화하여 농산물 유통시스템 물류유통구조를 혁신, 새만금에 '정착겨주형 미래 농생명 농업인 육성단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22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민선 6기 승하진 지사의 이른바 3라농정(三樂農政)은 '있는 사람도 떠나는 농촌'으로 전락하였고, '보람 찾는 농민'은 농가부채가 민선6기 4년 동안 30% 넘게 증가해 '빛 구덩이에 떨어져 허덕이는 농민'을 양산, 농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농업의 소득 역시 4년 동안 10% 가까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대부분의 농민들은 첨단과학기술을 농업에 적용시킬 정도로 익숙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현실이다"며, "그 해법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시킨 '공유경제 복합형 뉴스마트팜'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 웃 인재 영입에 "한국당 이삭줍기로 바른미래 되겠나"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출신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것과 관련해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이합집산을 한다지만 한국당을 탈당한 사람들이 이삭줍기해서 언제 바른미래가 만들어지겠는가"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김효은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786명의 입당원서를 받아온 안철수 위원장의 흐릿한 미소에서 한 명이 아쉬운 바른미래당의 당세가 느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인재 영입 1호라는 정대우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 공식신고자인지는 아리송하다"며 "지금쯤 사라진 당, 국민의당 영입 1호를 기억하는가? 이준서, 이유미씨다. 작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제보 조작 사건의 불법행위를 한 주인공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엄청난 사건에도 안철수 위원장은 형식적인 사과 뒤에 본인은 제보 조작과는 무관하다고 한 발 뺐다"며 "새정치를 하고 싶거든 대선에서 자행한 제보조작 사건에 대해 사과부터 제대로 하라"고도 했다.

김 부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의 묻지마, 무더기 인재영입, 인재(人材)인 줄 알았던 사람이 당을 망칠 인재(人災)가 될지가 기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 “최경환 ‘국정원 자금 靑에 지원’ 요구했다”

### 이헌수 전 국정원 기초실장 법정 증언... "남재준 원장, '안 된다' 질책하듯 거부"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거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국가정보원에 청와대 지원을 직접 요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남재준(73) 전 국정원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 3차 공판에서 이헌수(65) 전 국정원 기초실장은 이 같이 증언했다.

이 전 기초실장은 "2013년 5월 원내대표로 선출된 최경환 의원에게 국정원 업무 보고를 했다"며 "당시 최 의원은 '청와대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국정원에서 지원할 수 없느냐'고 물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보고에 동석한 실무진을 나가게 한 뒤 둘만 있는 자리에서 최 의원은 '몇 억 정도 지원 안 되냐'고 말씀했다"며 "제가 어렵다고 대답했더니 '원장에게 한번 말해보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전 기초실장은 "이를 보고했더니 남재준 원장은 질책하듯이 '안 된다'고 했다"면서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남 원장은 이미 5월 중순경 청와대에 특별비를 주라고 지시했음에도 5월 하순 최 의원이 요구하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전 실장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날 이 전 기초실장 증언에서는 남 전 원장이 국정원 특별비 상납을 비밀스럽게 처리했지만 당시 국정원 내부에서 관련 소문이 돌았던 정황도 나타났다.

그는 "국정원장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보고서를 갖다주는데 두툼한 것이 든 봉투를 가져다준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2013년 8월경 직원을 불러서 확인했고 남 원장이 국정원장 특수사업비 중 일부를 청와대에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2014년 10월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예산 편의를 바달라는 부탁과 함께 특별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4일 최 전 의원 측은 "의원을 전달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뉴시스




##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